

“일본 원전 오염수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해야”

시·군의장협 결의안 채택

“피해 예측·국민건강 보호를”

‘전남 방문의 해’ 참여·협력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5일 무안 송달예술문화관에서 14개 시군의 회 의장과 김산 무안군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9회 월례회를 갖고 지역발전과 현안사업을 공유했다.

이날 월례회는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강필구 협의회장의 개회사, 김산 무안군수의 축사, 안건심의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 심의에서 협의회는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이 제안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2023년 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에서 1km 떨어진 해상에 방류를 최종 결정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의 완전 제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인간의 DNA를 변형시키고 생식기능을 떨어뜨리는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며 “예정대로 오염수 해상방류가 시작되면 국내, 특히 섬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의 수산업 붕괴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육상 생태계도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는 15일 오전 무안 송달예술문화관에서 제279회 월례회의를 열어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무안군 제공

협의회는 특히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추진하

고, 선박의 평형수 등에 의한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를 주무 부서로 지정해 방사능

안전성 검사, 피해 예측 및 어업인 보상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원,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안건 심의에서는 또 오는 21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22~2023 전남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과 4월 21일부터 10일간 개최되는 ‘2023화순고인돌 축제’ 홍보와 참여에 뜻을 모았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산 무안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이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대상을, 무안군의회 김원중 의원이 의정봉사대상을 받았다.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는 지역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의회 간 현안 및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4월 28회 월례회는 구례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시, 미래차 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산구 오운동 503번지

광주시가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를 15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광주시 광산구 오운동 503번지 일원으로 338만4,135㎡(102만평)다.

이번 조치는 광주 미래 100년의 성장동력 창출과 광주경제 중심축인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미래차 산

단 조성 예정 부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자가 상승 등을 노린 불법적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지정기간은 2028년 3월 14일까지로 5년이며, 광주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광산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길용현 기자

도, 지역축제 연계 한우 소비촉진 ‘호응’

명품한우 시식·할인행사 인기

남도장터 등 온라인 판매 강화

전남도가 지역축제와 연계해 추진중인 한우고기 소비 촉진행사가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제22회 광양매화축제’ 현장에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운 한우농가를 돕기 위한 소비촉진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정인화 광양시장, 지역 축협장, 한우협회, 한우농가 등이 참여해 전남산 명품 한우를 홍보하고 시식과 할인판매 등을 진행했다. 3일간 진행된 소비 촉진행사에서는 모두 1,800만원의 매출을 기록

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7일간 열린 제51회 강진청자축제에서도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해 6일간 모두 1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전남도는 오는 10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3국제농업박람회를 비롯, 연말까지 이어지는 100여개 지역축제와 연계, 대대적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애초 8월로 예정된 ‘명품한우대축제’를 5월 가정의 달로 앞당겨 도정 앞 남악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남도장터 기획전과 특판행사 등 온라인 판매도 강화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도 및 시군 지부를 통해 한우고기 판매 식당의 적정 소비자가격 판매도 유도한

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우 산지 가격이 하락해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범국민적 한우고기 소비 확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소비자가 한우고기를 알뜰하게 구매하도록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한우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 무이자 지원과 한우 증체를 향상 지원 등 농가 경영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

또 한우 암소 자율 감축, 전남 으뜸한우 브랜드 육성, 한우고기 수출 등 한우 사육 우수 적정 관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근산 기자

시민들에 물 절약 호소하면서...

정수장선 깨끗한 물 ‘줄줄’

광주시가 심각한 가뭄 위기를 극복하며 시민에게 물 절약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정수장에서는 깨끗한 생활용수가 일상적으로 버려지고 있다.

1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광주 남구 덕남정수장에서 외부로 설치된 우수관은 상당량의 생활용수가 상시 배출되고 있다.

시냇물이 흐르듯 끊임없이 배출되는 이 물은 정수장이 수질 측정을 위해 자동 수질 측정기에서 사용한 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수질측정기는 정수 단계별로 도착수, 침전수, 여과수, 정수 등에 대해 각각 탁도나 pH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인데 덕남정수장에는 모두 10대가 설치돼 있다.

수질 측정에 사용된 물이라도 대부분은 다시 정수 작업을 거쳐 정상적인 생활용수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용연정수장에서는 자동 수질 측정기에서 사용한 물을 회수조에 모아 댄다가 다시 정수 작업을 거쳐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덕남정수장의

경우 자동 수질 측정기를 거친 물을 한 곳에 모으거나 정수장으로 다시 보낼 수 있는 설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우수관을 통해 모조리 흘러보내고 있다. 깨끗한 물이 1년 내내 하수관으로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덕남정수장은 이렇게 낭비되는 생활용수의 양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수장 관계자는 “우수관에서는 수질 측정에 사용된 물이 지하수와 함께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버려지는 양은 전체 정수량에 비하면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덕남정수장은 지난달 12일 송수관로 밸브가 고장 나 생활용수 5만6,000톤이 넘쳐흘렀고, 2만8,000여세대가 단수되는 사고가 났던 곳이다. /길용현 기자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는 정책적 퇴행이다”

광전연 구성원들 거센 반발

광주전남연구원 구성원들이 연구원 재분리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연구원 구성원 일동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연구원 재분리 추진에는 합리적 명분도, 민주적 소통의 과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성원들은 “시도는 재분리 명분으로 상생 연구 부족, 이해 상충 주제 연구 기피, 지역별 특화 연구 미흡 등을 들었다”며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성찰할 부분도 있지만, 재분리라는 중대한 결정

을 위해서는 연구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종합·객관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구감소, 지역불균형 심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서는 초광역화, 지역 간 통합으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광주와 전남이 따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퇴행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70% 이상, 박사급 연구위원 80% 이상이 재분리에 반대한다”며 “재분리로 32년 동안 쌓은 정책연구 역량을 분산시킬지, 통

합 실효성을 높여 지속적인 성장을 추동할지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다가 1995년 광주시출연을 통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됐다. 2007년에는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으며 2015년 민선 6기 당시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다시 통합돼 현 체제를 갖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6일 각각 연구원 재분리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연다. /정근산 기자

www.518run.com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23회 5·18 마라톤대회

일시 2023. 5. 20 (토)

장소 광주 송촌공원 운동장 (송촌보 내)

종목및참가비 5.18km 10,000원
10km, 하프코스 30,000원

접수기간 ~ 2023년 4월 21일(금) ★현재접수중★

접수방법 전화, 팩스, 518run.com, 0518run@hanmail.net

문의 TEL (062) 720-1099 FAX (062) 720-1020 카카오톡 ID : jndnnews

주최 518기념재단 M 전남매일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은행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전라남도지부 광드클래스(주) 보성

송촌보운동장 5km, 10km, 하프코스 출발/도착

5km 반환점 10km 반환점 하프1차 반환점 하프2차 반환점